

# ‘공공앱 사전타당성 검토제’ 도입

## 행안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개정, 이달 중 시행 계획... 관리체계 강화 골자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바일 서비스가 꼭 필요한 경우 개발할 수 있도록 ‘공공앱 사전타당성 검토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서비스의 공공앱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을 개정,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공공앱(App)이란 공공기관에서 모바일 앱 형태로 국민,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말한다.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은 공공기관이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운영할 때의 관리사항이 규정돼 있다.

지침은 각 공공기관에서 신규로 공공앱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에 앞서 반드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를 거쳐거나, 기관 자체적인 사전 검토절차를 거쳐도록 의무화해 공공앱이 꼭 필요한 경우에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앱 사전타당성 검토제’가 도입된다.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든 공공앱을 대상으로 매년 운영 성과를 측정하고 측정된 결과를 누리집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공공앱 성과 인터넷 공개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의 성과측정 결과를 행정안전부

에서 확인 점검한 후 인터넷에 추가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성과측정 항목에 공공앱 ‘내려받기(다운로드) 수’나 ‘최신 업데이트 여부’ 등 외에 ‘이용자 만족도’와 ‘이용자수’ 항목을 추가해 성과측정의 실효성을 높인다. 성과측정 대상도 공공앱 뿐만 아니라 내부 행정용 모바일 앱도 포함되도록 해 각 공공기관에서 스마트폰용 앱을 개발할 때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모바일 서비스 확대에 따라 보안 우려도 커지고 있어 각 공공기관에서 모바일 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토

록 의무화한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용이 저조하거나 업데이트가 미진한 800여 개의 공공앱을 폐기토록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개정된 지침을 적용해 공공앱에 대한 준비를 한층 더 강화하여 고품질의 공공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장영환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모바일 전자정부가 품목한 사전관리체계와 투명한 성과공개를 통해 질적으로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 ‘파격’ 軍 장성 인사... 아직 미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국방개혁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이번 장성급 인사가 파격을 취했지만 아직 미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년 만에 합참의장에 공군출신을 임명했지만 비(非)육사출신이 올 것이라 예상됐던 육군참모총장에 육사출신이 내정됐기 때문이다.

당초 육사가 최우선 군 개혁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군 안팎에서는 비육사 출신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육사출신이 임명되면서 이번 인사만 놓고 보면 문 정부의 육군 개혁이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이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방부는 8일 신임 합참 의장에 정경두 공군참모총장(공사30기·공군 대장)을, 육군참모총장에는 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용우 육군 중장(육사39기), 공군참모총장에는 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인 이양근 공군 중장(공사31기)을 각각 내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성 인사를 발표했다.

고현수 1군 부사령관(화군20기), 박한기 8군단장(학군21기), 박종진 3군사령부 부사령관(3사17기) 등이 물망에 올랐고, 이들 가운데 1명을 육군참모총장으로 내정하는 방안을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종 과정에서 육사 39기인 김용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육군참모총장 후보자로 낙점됐다. 육군 내부에서 비육사 출신의 총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비토가 쏟아진 것이 반영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인사에서 기수 파괴를 이뤄냈다는 점은 의미 있는 부분으로 평가된다. 육사 39기인 김용우 중장이 2기수를 뛰어 넘어 육군참모총장으로 내정되면서 자연스러운 육군 내 ‘물갈이’는 가능해졌다.

임호영 현 연행사 부사령관 지리는 육사 40기인 김병주 3군단장이 물려받으면서 육사 39기와 40기가 동시에 대정에 진출하는 파격적인 인사가 단행됐다. /뉴스1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위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씨를 위로하고 있다.

## 文대통령 “복지정책, 국가발전 요소로 이해해야”

### “민생·일자리·소득 정책...기본생활·공정기회 보장해야”... 복지 정책 발굴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복지정책은 시혜적 관점에서 탈피해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요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복지정책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정책인 동시에 일자리 정책이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보육·교육·의료 등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무너진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각 부처는 국민들이 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복지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분야별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시행해 주

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생활 물가 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드린다”며 “올 여름은 가뭄과 폭우, 폭염으로 이어지는 이상 기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농수산물 공급 이상으로 인한 생활 물가 급등이 우려되는데 관련 부처에서는 더위에 물가까지 국민들이 속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뉴스1

### 일자리위원회 “국정운영, 일자리 중심 개편”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정부가 우리 경제 패러다임과 국정운영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있는 것은 과거 방식으로는 민간부문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은 정부의 강한 의지나 기업에 대한 부탁만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 신중년 인성3모작 기반 구축계획,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등 3가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통과된 안건은 정부가 모든 부처의 주요사업을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재정자원을 집중하고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기업에 세제 및 금융지원을 적극 시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과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우대 받고,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는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고용탑’을 수여하고 각종 혜택을 드리는 방안도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현재 고용상황에 대해 “앞으로 4년 동안 예코보 세대(1991-96년생)이 고용시장에 본격 진입함에 따라 청년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자리 질을 높이는 문제는 노사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고, 일자리 불분단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창업 여건도 우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 北, 핵 완성 ‘마이웨이’ 걸나... 추가 도발 가능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대하는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감지된다. 반발 성명의 수위를 높이고, 6자회담 당사국이 한자리에 모인 시점에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묶어서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는 일단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두 차례 성공하면서 핵 무력 완성에 다다랐다는 자신감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북한은 핵 무력의 다종화를 위한 교체연료 기반의 ICBM 개발 등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도발을 중단하라는 주변국들의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지는 양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자 북한은 더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대북 원유공급 조치는 제외됐으나 ▲석탄 등 주요 광물의 수출 예외조항 삭제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등 실질적으로 북한 정권을 압박할 수 있는 조치들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은 지난 7일 정부성명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대변인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며 비난 총공세를 펴고 있다.

북한은 정부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2371호에 단호한 정의의 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것으로써 향후 추가적인 도발을 예고했다는 관측이다. /뉴스1

##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년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씨름영상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남원시**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